



용인특례시의회

용인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

2026. 3.

용인특례시의회
김상수 의원

용인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

- ✓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장애인 복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, 장애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논의
- ✓ 현장 중심의 사각지대를 짚어보고, 용인특례시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

1 결과 개요

□ 배경 및 목적

○ (배경) 기존 획일적 복지 패러다임의 한계

- 현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분절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, 장애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개별적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(배경) 장애 인구 특성 변화 및 새로운 복지 수요 발생

- 발달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가족의 돌봄 고통 심화, 장애인의 조기 노화 현상 등 생애주기별 새로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기존 제도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함

○ (목적) ‘맞춤형 케어’ 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색

-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, 장애 당사자 중심의 ‘개별화된 지원 계획(ISP)’ 및 ‘지역사회 통합 돌봄’ 체계로 용인시 장애인 복지의 방향성 재정립

○ (목적) 현장 중심의 사각지대 발굴 및 대안 마련

- 장애인 당사자, 부모회,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, 체감도 높은 밀착형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

○ (목적) 실행 가능한 용인형 맞춤형 정책 기반 조성

-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을 바탕으로, 용인특례시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제·개정 및 차기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입법·행정적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세부 내용

- 일 시: 2026. 3. 3.(화) 15:00
- 장 소: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
- 참 석 자: 용인시 장애인 부모회, 장애인 단체 대표 및 회원, 관내 장애인 복지관장,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 30명 내외
- 세부일정

소요시간	주요내용	장소	
14:30 ~ 15:00	등록 및 안내	용인 시의회 대회의실	
15:00 ~ 15:10	1부 개회식 개회사(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)		
15:10 ~ 15:40	2부 주제발표: 용인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방향 발표: 강창욱 (前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) (現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 대표이사)		
15:40 ~ 15:50	휴식 및 자리정돈		
15:50 ~ 17:00	3부 종합토론: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대안		
	좌장		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
	토론1		유향금 용인시장장애인부모회
	토론2		이선덕 처인장애인복지관장
	토론3	전욱재 용인시 장애인문화협회장	
	토론4	권규호 용인시 장애인복지과장	
17:00 ~	종합정리 및 폐회		

2 토론회 주요 내용

□ [주제발표] 용인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방향 (강창욱 교수)

- 현행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한계 진단
 - 현재의 장애인 복지는 공급자(행정)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, 개별 장애인의 고유한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분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음
 - 시설 수용 중심의 정책은 장애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함

- 맞춤형 케어를 위한 핵심 전략 제언
 - 개별화된 지원 계획(ISP) 전면 도입: 장애 당사자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, 개인의 욕구와 강점을 기반으로 한 1:1 맞춤형 복지 서비스 설계가 필요

- 지역사회 통합 돌봄(Community Care) 이행
 -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'살던 곳'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·의료·요양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
 -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: 민·관이 협력하는 전문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해야 함

□ [지정토론 1]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및 국가적 제도 개선 (유향금 지부장)

- 장애인 조기 노화에 따른 '노인 연령 하향' 촉구
 -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대수명은 비장애인 대비 약 10~15년 짧으며, 조기 사망 위험과 2차 질환 노출 빈도가 매우 높음
 - 그럼에도 노인복지법 등은 일괄적으로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, 조기 노화가 진행된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노인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이 시급함

○ 장애인 주치의 제도 및 통합 체계 구축

- 만성질환 예방과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'장애인 주치의 제도' 도입이 필요
- 기존의 병원·시설 중심,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고,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선별적 지원이 아닌 '필요 기반의 보편적 지원'을 제공하는 '장애인 서비스 통합 체계'를 구축해야 함을 주장
- 가족의 돌봄 고통 분담: 부모 사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및 거주시설 현대화 등 공적 책임 강화 요구

□ [지정토론 2] 법률 지원 및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(이선덕 관장)

○ 발달장애인 배상 법률 지원 및 지자체 의무보험 도입

- 발달장애인의 돌발적 행동(자해, 타해, 기물파손 등)은 장애 특성에서 기인함에도, 민간 보험사는 위험률 산정 불가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음
-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파탄과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이천시 등의 선례를 참고하여 지자체 차원의 배상 책임보험 일괄 가입 및 법률 지원 제도를 신설해야 함

○ 지속 가능한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인 앱('무한충전소') 개발

- 전기차 충전소 대비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1/100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며, 공공데이터의 현행화 미비로 실제 헛걸음하는 사례가 빈번함
- 단순 위치 안내를 넘어, ▲QR코드 기반 스마트 고장 신고 시스템 (이용자 직접 신고) ▲최근 이용 기록 분석을 통한 고장 자동 필터링 ▲휠체어 이동 가능 경로(단차, 경사로 고려) 안내 기능을 갖춘 실효성 있는 전용 앱 개발을 제안

□ [지정토론 3] 장애인 단체 자립 및 사회참여 보장 (전옥재 회장)

○ 단체 운영의 현실화 및 이동권 지원

- 장애인 복지 전달의 최일선에 있는 단체들이 보조금에만 의존하거나 단순 보여주기식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함
- 단체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과, 유형별 단체 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이동 차량(특정 버스) 지원 및 마을버스 저상 버스 도입이 동반되어야 함

○ 문화·예술 향유권 및 전담 기구 설치

- 재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제정 및 장애인문화센터 설치가 필요
-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,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 기관 설치, 장애인 일자리 전담 기구 설치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인프라 확충을 촉구

□ [지정토론 4] 용인시 장애인 복지 향후 추진 방향 (권규호 과장)

○ 용인시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인프라 지속 확충

- 2026년 장애인복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.13% 증가한 1,415억 원으로, 활동 지원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
- 용인시는 2026년 4월 보정·동백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2개소를 추가 개관하고, 6월에는 장애인회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음

○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기조 적극 부응

- 타 장애 대비 돌봄 부담이 과도하고 도전 행동 대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충에 깊이 공감함
- 이에 따라 주간·방과후 활동 바우처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1:1 서비스 지원 등 다각적인 맞춤형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

3 토론회 사진

